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6
----------	------

발의연월일 : 2024. 7. 11.

발 의 자 : 윤준병 · 민형배 · 박민규
이성윤 · 박희승 · 허종식
서영교 · 이재관 · 문정복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과로사등’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 개념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 국가 등의 책무, 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에 있는 사람이나 관련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과로사와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 및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하 “과로성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이하 “과로성 질환”이라 한다)의 발생
 - 나.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의 발생
라.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의한 자살

2. “과로사등”이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은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
무임을 확인하고, 과로사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며, 과로사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
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기본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공공기관·사용자·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국민과 사용자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로사등의 예방과 그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과로사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근로시간과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과로사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7.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예방

제9조(과로사등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의 발생규모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업종별 근로시간 및 과로사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작업환경·조직구조·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

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단체) ①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과로사등 발생시 협의회의 심의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이 근로자 및 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위해와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